

국제 농업 정보 (2022. 3)

미국

- 보복 관세의 농업 부문 영향
- 유기농 사료 작물과 축산물 시장

유럽

- 유럽연합의 SDG2 실현을 위한 방법

일본

- 일본 품종 방위적 허락 추진 외
- 사람·농지 미래 비전 확립·실현 지원 사업 조성
- 농가 협력을 통한 유기 단지화 추진 외





미국



보복 관세의 농업 부문 영향¹⁾



□ 보복 관세의 농업 부문 영향

- 2018년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요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인도, 멕시코, 터키 등 6개 국가에서 미국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
 - 관세가 부과된 상품에는 2017년 기준 304억 달러에 해당하는 농식품 수출품이 포함되었으며, 각 상품은 최소 2%부터 최대 140%의 관세를 부과받음.
 - 2020년 1월 15일에 미국과 중국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Phase One Agreement)를 통해 일부 상품에 대한 무역 관세를 조정하였고, 2021년 10월에는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였음.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국가가 미국 농산물 수출에 부과한 관세는 총 270억 달러임.
 - 중국이 가장 많은 관세인 257억 달러(약 95%)를 부과하였으며, 그 뒤로 유럽연합(6억 달러), 멕시코(5억 달러), 캐나다, 터키, 인도 순으로 관세를 부과함.
 - 보복 관세로 인하여 연간 132억 달러의 피해가 전체 품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관세로 인하여 미국산 농산물이 중국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20%에서 2018년 12%로 감소하였음.

1)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The Economic Impacts of Retaliatory Tariffs on U.S. Agriculture"(2022.1.1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usda.gov/>).

- 관세는 다양한 품목에 부과되었으나 피해는 대두, 수수, 돼지고기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됨.
 - 가장 큰 피해를 본 품목은 대두로 연간 94억 달러(전체 피해의 71%), 그 뒤로 수수(8억 5,400만 달러, 6%), 돼지고기(6억 4,600만 달러, 5%)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밀(3억 5,100만 달러), 옥수수(1억 4,200만 달러)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입은 품목들로 나타났으며, 이외 과일, 채소, 견과류 피해는 총 8억 3,700만 달러로 나타남.
- 지역별로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서부 지역에서의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아이오와, 일리노이, 캔자스 지역에서 각각 146억 달러, 141억 달러, 9억 5,5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 주 단위 피해액은 수출액에 비례하지는 않았음. 대신 보복 관세의 주요 목표가 되어 피해가 크게 발생한 대두, 수수, 돼지고기, 목화의 수출액의 피해지역이 많이 발생함.
-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주로 브라질 농산물로 대체됨.
 - 2017년에 대중 농산물 수출액이 많은 국가는 브라질, 미국,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순으로 나타났으나 본격적인 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수출액은 유럽연합 수출액보다 적어짐.
 - 미국산 대두 수입은 관세 부과 이후 브라질산 대두 수입으로 대체됨. 2002년에 10억 달러 미만이었던 브라질산 대두 수입액은 2017년에 들어서 200억 달러로 성장함.
- 2020년에는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하여 농산물 수출액이 회복되었으며, 무역 관계 개선 외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중국 발병으로 인해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
 - 20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후 3월에 중국이 감세 계획을 발표하자 농산물 수출액이 회복되었음.
 - 감세 품목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수출액이 118% 증가하였으며, 감세 품목이 아닌 품목들은 수출액이 83% 증가함.

- 2020년 대중 미국 농산물 수출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무역 정책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료 수입 확대에 의한 것임.
- 하지만 아직 중국 농산물 수입액 중 미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2.0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기농 사료 작물과 축산물 시장²⁾



□ 유기농 사료 작물과 축산물 시장

- 미국 내 유기농 식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유기농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유기농 사료 시장 거래가 적게 일어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가격,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갈등 등에 대한 장기적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은 199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유기농 인증은 연간 5,000달러 이상의 유기농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에게 미국 농무부의 인증을 부여해 시장에서 유기농 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채소의 8.4%, 과일 및 견과류의 4.3%가 유기농으로 생산됨. 전체 농업 생산에서 유기농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특히 곡물, 유제품, 축산물은 유기농 상품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작음.
 - 유기농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유기농 사료 시장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은 얇은 시장(thinly traded markets)이라는 점에서 유기농 육류 시장의 성장과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2)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Organic Feed Grains and Livestock: Factors Factors That Influence Outcomes in Thinly Traded Markets"(2022.2.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 유기농 육류 및 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농 사료 작물 생산 시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유기농 육류 및 유제품)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젖소 등)은 연속적(최소 3번의 임신 기간)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함. 유기농으로 재배된 사료를 먹여야 하며, 건강 관리, 사육 환경 등도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유기농 사료 작물 재배 토지) 화학비료와 살충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충분한 완충 지대를 확보해야 함.
 - (유기농 사료 작물 양분 관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토양 침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양분을 관리해야 함.
 - (유기농 사료 작물 종자) 종자 번식을 위해서 금지 물질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유전자를 조작한 품종은 허용되지 않음.
 - (유기농 사료 작물 병충해 관리) 병충해 예방, 물리적(기계적) 방제, 허용된 물질을 통해서만 병충해 관리를 시행할 수 있음.

- 유기농 유제품, 소고기 생산과 유기농 사료 작물 시장(알팔파, 옥수수, 대두 등)은 시장 지배력, 신뢰도, 가격 변동성, 계약 등에서 특수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지역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 지역 시장 내에서 유기농 사료의 판매자 수에 비해 구매자 수가 적어 불균형한 시장 지배력이 나타남. 사료 작물 구매자들은 쉽게 판매자를 바꿀 수 있음.
 - (신뢰도) 유기농 육류 생산자들이 사료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유기농 사료 공급업체를 바꾸고 있어, 유기농 사료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낮은 신뢰도가 형성됨.
 - (가격 변동성) 유기농 소고기 시장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며, 이는 낮은 가격 투명성, 구매자와 판매자가 적은 시장 구조, 강한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 등의 원인으로 발생함. 알팔파(사료 작물)의 경우에 수직계열화로 인하여 새로운 생산자의 진입이 어려움. 또한 유기농 옥수수와 대두를 사료로 사용할 때에는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음.

- (계약) 유기농 원유(raw milk)를 계약할 때 불분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이를 이용하여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재배(혹은 생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적으로 계약 재배 지원을 통해 사료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 표준화로 계약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소규모 생산자의 거래 비용을 낮춰줄 수 있음.

- 계약 시 의무적으로 가격을 보고하도록 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료의 특성과 연계하여 가격 범위를 제공함으로써 사료의 품질에 따른 가격 결정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유도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2.2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연합의 SDG2 실현을 위한 방법³⁾



□ 유럽연합의 SDG2 실현을 위한 방법

- UN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2번째(SDG2)는 기아와 영양 섭취 부족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것이지만,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식량안보를 위협받는 원인으로 갈등 및 안보 불안(약 9,900만 명, 23개 국가), 경제 충격(약 4,000만 명, 8개 국가), 극한 기후(약 1,500만 명, 15개 국가)가 대표적임.
 - 2030년까지 기아 및 영양부족 문제와 관련된 지표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영양결핍 인구수, △식량안보 불안의 확산, △아동 비만 인구, △높은 식품 가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와 이로 인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지 못하는 인구수 등의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연합 회원국들 또한 SDG2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몇몇 지표는 악화되고 있음.
 - 2021년 지속가능한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이 SDG2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페인, 포르투갈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됨.

3) 유럽의회조사처의 "SDG 2 - zero hunger, and EU action against hunger and malnutrition"(2022.1.2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

- 유럽연합 내에서 SDG2와 관련된 지표들은 5년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에서의 암모니아 발생량, △지하수에 포함된 질산염의 양 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연합은 영양 섭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농업 생산의 환경 영향, △식품 구매력 유지를 고려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공정 및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생산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면서도 농업 생산성과 농업 소득이 높도록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함. 또한 유기농업 면적의 확대를 통하여 인간의 건강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함.

- (농업생산의 환경 영향) 양분 관련 오염(암모니아, 질산염 등), 토양 침식, 생물다양성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관리가 필요함.

- (식품 구매력 유지) 유럽연합 인구의 6.7%인 3,300만 명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심각하게 불안정한 식량안보에 노출되어 있었고,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표 1〉 SDG 2 달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대표적 농업정책

구분	정책 이름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생산	Horizon Europe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Cluster 6(식품, 바이오경제, 천연자원, 농업환경) 부문에 90억 유로가 투자되어 관련 연구가 진행
	Ac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Organic production	• 2030년까지 농경지의 25%를 유기농 생산으로 전환 - 지속가능한 살충제 사용을 위하여 현재 살충제 사용량보다 50% 이상 감축
농업생산의 환경 영향	공동농업협정(CAP)	• 새로운 CAP(2021-2027)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더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결과 창출
식품 구매력	ESF+	• Next Generation EU(2021-2027)는 총 880억 유로 규모의 다년도 재정 투입 계획으로 이에 속한 ESF+ 펀드에서 최소 25%의 재정은 포용 사회에 투자되어야 하며, 5%는 아동 빈곤, 3%는 취약계층에 대한 물적 지원에 사용되어야 함.

- 유럽연합은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제3세계(third countries)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43억 유로를 투입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 무역 규정 등이 제3세계의 친환경적 농업생산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2.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일본 품종 방위적 허락 추진 외4)



□ 일본 품종 방위적 허락 추진

- 농림수산성은 등록 품종을 해외에서 육성자권 보호를 하기 위해 '방위적 허락' 보급에 나섬.
- 허락료(저작권료)를 받고 타 국가의 특정 생산자 단체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독점 재배를 인정하는 대신 무단 재배 등 위법 사례를 감시하도록 함.
- 품종 개발자는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종을 재배 국가에서만 판매하는 등 일본의 수출에 저해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농림수산성은 방위적 허락에 임하는 품종 개발자를 위해 계약 체결에 필요한 비용의 2/3를 지원함.
 - 2021년도 추경예산에서 3억 3,900만 엔,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서 1억 7,700만 엔을 계상한 '식물 품종 등 해외 유출 방지 종합대책·추진사업'에서 지원함.
-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재배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도 품목등록이 필요함. 농림수산성은 해외에서 등록 출원을 지원하여, 2021년 9월 말 시점에 117개 품종을 등록하였음.

4) 일본 농업신문 “日本品種の独占栽培団体が監視「防衛的許諾」普及後押し 農水省”(2022.1.19.), “子実トウモロコシ増産促す 転作・機械導入に助成 農水省”(2022.1.1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52350>,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52099>).

- 하지만 실제로 무단 재배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품종 개발자가 현지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현지 변호사에게 감시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는 고액의 비용이 소요됨.
- 농림수산성은 방위적 허락을 통해 해당 국가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생산단체 정보망을 활용, 위법 사례를 쉽게 발견하고, 감시 비용도 낮출 수 있음.
- 품종 개발자와 생산자 단체가 맺는 계약에는 해당 작물을 일본이 수출하는 데 있어 방해되지 않을 것과 해당 품종이 판매·유통하는 시기를 일본에서 수출 시기와 중복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도 상정됨. 이러한 조건을 통해 해당 작물의 연중 공급이 가능해지고 일본산 농산물 시장 확대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자실용 옥수수 증산 촉진

- 농림수산성은 수입 사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2년에 논 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사료 작물인 자실용 옥수수 증산을 촉진하고자 함.
 - 자실용 옥수수를 논 리노베이션 사업⁵⁾의 대상에 추가하여 10a당 4만 엔을 지원, 도도부현 계획으로 지정된 산지에는 논 활용 직접지불교부금으로 1만 엔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며,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 도입·리스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도 마련하였음.
- 2021년도 자실용 옥수수의 논 작부면적은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약 900ha 수준임. 농림수산성은 수입 옥수수 가격 급등에 따라 자실용 옥수수가 농후사료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자 함.
- 2021년도 보정예산 중 논 리노베이션 사업은 410억 엔이 조성되어 있으며, 실수요자와 사전 계약 및 배수 대책 등의 저비용 생산을 위한 노력을 지급요건으로 함. 전년도 산은 자실용 옥수수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5) 논농사를 수출 및 가공품 원재료 등의 새로운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리노베이션하기 위해, 신시장 개척용 쌀 및 가공용 쌀, 고수익작물(채소), 밀·대두에 대한 수요자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생산 등을 통해, 수요 창출·확대를 위한 제조기기 및 시설 등 도입을 지원함.

- 한편, 2022년도 예산안에 3,050억 엔을 계상하고 있는 논 활용 직접지불교부금에서는 전략 작물 조성에 3만 5,000엔을 책정함. 자실용 옥수수에 대해 논 활용 직접지불교부금에서는 논 농업 고수익화 추진 조성에 1만 엔을 지급함. 논 리노베이션 사업은 전략 작물 조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만, 논 농업 고수익화 추진 조성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음.

〈그림 1〉 자실용 옥수수 주요 지원

논 리노베이션 사업	10a당 4만 엔	중복 불가	중복 가능
논 활용 직접지불교부금	3만 5,000엔		
- 전략 작물 조성	1만 엔		
- 논 농업 고수익화 추진 조성			
축산 생산력·생산 체제 강화 대책 사업			
수확용 기기, 건조기 등 도입·리스 비용 반액을 조성			

- 2020년도 사료 자급률은 약 25%이지만 자실용 옥수수 등의 농후사료만 보면 12% 수준임. 농림수산성은 2030년까지 사료 자급률을 각각 34%, 1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2.0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람·농지 미래 비전 확립·실현 지원 사업 조성 6)



□ 사람·농지 미래 비전 확립·실현 지원 사업 조성

- 농림수산성은 2022년, 지역의 농지 이용 장래상을 계획하는 ‘사람·농지 플랜(이하 플랜)’을 지원하고자 ‘사람·농지 장래 비전 확립·실현 지원 사업’을 추진함.
- 농림수산성은 플랜 실질화 기한이었던 2020년까지 지역에서의 논의를 지원하는 ‘사람·농지 문제 해결 가속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플랜 법정화를 고려하여 2022년도 예산으로 같은 맥락의 ‘사람·농지 장래 비전 확립·실현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을 부활시켰으며, 3억 엔을 책정함.
- 농림수산성은 통상 국회에서 농업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을 개정하여, 사람·농지 플랜을 시정촌이 확정할 수 있는 계획으로 법정화하고자 함.
 - 플랜에서는 10년 후 목표 농지 이용 모습인 ‘목표지도’를 작성하여 각 필지의 이용자 명확화를 추진함.
- 지원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플랜 지원은 ① 취락·지역의 논의, ② 논의를 조정하는 전문가 활용, ③ 농지이용안 검토·작성, ④ 농지 이용자 명확화, ⑤ 농업위원회 및 JA, 토지개량구(土地改良區) 등 관계 기관에 의한 검토회 개최, ⑥ 플랜 주지, 실행 상황 확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폭넓게 지원함.
 - 지원 대상 경비로써 비품비 및 자료 작성비, 목표지도 작성에 관한 업무 위탁비, 단기 인력 고용 인건비 등을 지원함. 또한, 시정촌 담당 직원이 미치지 못할 부분도 고려하여,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시정촌·JA 등 출신 선배(OB)들의 참여를 중시하고 이에 대한 사례금 등도 지원하고자 함.

6) 일본 농업신문 “日人・農地プラン策定「話し合い」に助成 JAOBの関与後押し 農水省22年度事業”(2022.1.24.), 농림수산성 “人・農地将来ビジョン確立・実現支援事業”(2022)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53318>, <https://www.maff.go.jp/j/keiei/soumu/yosan/attach/pdf/index-13.pdf>).

- 그 외에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의한 ① 시정촌 등에 설명회 및 의견교환회, 보급 계발, ② 시정촌 대응을 위한 조연·지도 등도 일정 금액을 지원함.
- 자세한 내용은 통상 국회에 제출하는 농업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개정안과 조정하여 향후 보충해 나갈 계획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2.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가 협력을 통한 유기 단지화 추진 외기



□ 농가 협력을 통한 유기 단지화 추진

- 농림수산성은 2022년 2월 3일,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이하 미도리 전략) 추진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신법안 골자를 제시하였음.
 - 그중 유기농업 단지화 추진 부문에서는 지역 모든 농가가 협정을 맺고, 이에 대해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이 인가하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 이러한 주요 골자는 2022년 2월 3일, 자민당 농림합동회의에서 제시하여 승낙되었음. 농림수산성은 화학농약 사용량 절반 감소와 화학비료 30% 감소, 유기농업을 전체 농지의 25%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미도리 전략을 2021년 5월에 책정했음. 신법안은 미도리 전략에 따르는 농가를 현의 인정을 통해, 세제나 투융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주임.
- 유기농업을 단지화하기 위해 지역 모든 농가가 합의하여 협정을 맺고 시정촌이 인가하는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협정에는 병해충이 다른 농지로 확산되지 않도록 완충대를 설치하거나 화학농약 날림(비산) 방지 자재를 사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도록 상정하고 있음.

7) 일본 농림수산성 “有機団地化を推進 全農家で協定 市町村認可 みどり新法案骨子”(2022.2.4.), 일본 농업신문 “野菜契約栽培を支援 10アール15万円 農水省、輸出向けも対象”(2022.2.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agrinews.co.jp/news/index/55781>,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56165>).

협정 인가 후 대상 지역에서 새롭게 영농을 시작하는 사람도 협정에 참여하도록 함.

- 신법안 기본이념인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량 시스템’을 농가와 식품산업 등 사업자, 소비자의 이해·연계를 통해 확립시키고자 함. 또한, 환경부하 경감과 생산성 향상 양립으로 이어지는 기술 연구개발 추진도 목표로 함.
 - 농가와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소비자는 농림수산물 구매를 통해 환경부하 저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신법은 공포 6개월 이내로 시행하고, 시행 5년을 목표로 재검토를 추진하고자 함.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추진 신법안 골자 개요

- (기본이념) 환경에 조화로운 식량 시스템 확립에 농가·사업자·소비자와 연계하여 국가 및 현, 시정촌은 필요한 정책을 시행, 농가 및 사업자는 사업 활동을, 소비자는 농림수산물 소비를 통해 환경부하 저감에 노력
- (지원 틀) 국가가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기본방침 책정
 - 국가 방침을 기반으로 현(광역자치단체)과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이 공동으로 기본계획 책정
 - 기본계획에 따르는 농가를 현이 인정
- (유기농업 단지화) 지역 모든 농가의 협의가 완료된 방제에 관한 대응을 담은 협정이 성립되면 시정촌이 허가, 허가 후에 지역에서 새롭게 농업을 시작한 사람도 참여
- (시행·재검토)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 시행 후 5년 재검토

□ 대규모 계약재배 산지 육성 강화

- 농림수산성은 2022년도 가공·업소용 및 수출 전용 채소를 대규모로 계약재배하는 산지를 지원함.
- 실수요자 니즈나 수출 대상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작황 안정 기술 도입 및 식물검역에 대한 대응 등을 하는 경우 10a당 15만 엔을 지원하며, 실수요자와 사전 계약한 JA나 농사조합법인 등 농가 5호 이상으로 만든 단체를 대상으로 함.

- 2022년도 예산안에 10억 1,900만 원을 계상한 '채소·시설 원예 지원 대책' 중 '대규모 계약재배산지 육성 강화 추진사업'에서 지원함. 2021년에도 동일한 사업이 있었지만 2022년은 수출용 채소를 새롭게 대상에 추가하였음.
- 실수요자와 출하 전까지 3년간의 계약을 맺은 후, 출하 규격을 가공용으로 재검토하고, 트레이서빌리티(생산·유통 이력을 추적하는 구조) 활용 등을 3년간 진행해야 함.
 - 또한, 토층 개량·배수 대책 및 병해충 방제·연작 장애 회피 대책 등도 실천하고, 수출용 채소는 식물검역이나 잔류농약 기준 등 수출 대상 국가의 규제에 맞춘 방제도 추진함.
- 가공·업소용과 수출용은 품목당 10ha~50ha, 생식용은 5ha~50ha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3년 후 출하량 등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함.

대규모 계약재배 산지 육성 강화 추진사업 포인트

- (지원대상) JA, 농업법인 등⁸⁾
- (대상 품목(일부는 출하 시기를 한정)) ▲가공·업소용: 당근, 마늘, 무, 브로콜리, 셀러리, 시금치, 양배추, 양상추, 양파, 토란, 토마토, 파, 호박 등, ▲생식용: 토마토, 호박, ▲수출용: 수출사업계획에 포함된 품목(토란, 감자 제외)
- (조성단가) 10a당 15만 엔
- (요건) ▲실수요자와 3년간 계약, ▲가공·업소용·수출용 10ha~50ha, 생식용 5ha~50ha, ▲출하 시기 확대 및 착황 안정 기술 도입, 수출 대상 국가 규제 대응 등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 02. 2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최소 농가 5호 이상이어야 함.